최근 일본경제 현황 및 주요 이슈

2023. 7.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순 서

Ⅰ. 일본경제 현황 ····· 1

1. 실물경제 ····· 1

2. 금융시장 ····· 3

Ⅱ. 주요 분야별 이슈 ····· 6

1. 통화(금융완화) ····· 6

2. 재정(재정건전화) ····· 8

3.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 9

4. 노동(노동개혁) ····· 11

5. 인구(저출산 대책) ····· 12

6. 조세(세수 확보) ····· 13

7. 한일협력 ····· 14

Ⅰ. 일본경제 현황

1. 실물경제

※ 내수 회복으로 2분기 연속 성장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흡

□ (개관) '23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7%를 기록

○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하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표 1 참고)

* 교역 상대국 : 수출 비중 2위 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4분기 감소(-22.9%, 전년동기대비)
주요 품목 : ('23.3) 반도체 등 전기부품(-11.4%), 자동차 부품(-25.9%) 수출이 감소(전년동월대비)

**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여행 및 대면 서비스 관련 소비 위주 증가

*** 기업실적이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기계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 2023년 5월 수출 특징, **아시아 수출은 감소하면서 미국 및 유럽 수출은 증가**
세: 대세계수출 0.6%, 아시아 –8.1%(**중국 –3.4%**, 홍콩 –10.2%, 대만 –19.5%, 한국 –11.3%, 필리핀 –20.9%, 베트남 –21.5%, 인도 23.5%), 북미 11.2%(미국 9.4%), EU 16.6%,

***** 2023년 5월 수출 지역별 비중: **중국 18.4%, 미국 18.8%**, EU 10.9%, 한국 6.7%

○ **금액 기준** 실질 GDP는 **556조 엔**('22년)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558조 엔)에는 **아직 미달**

< 표 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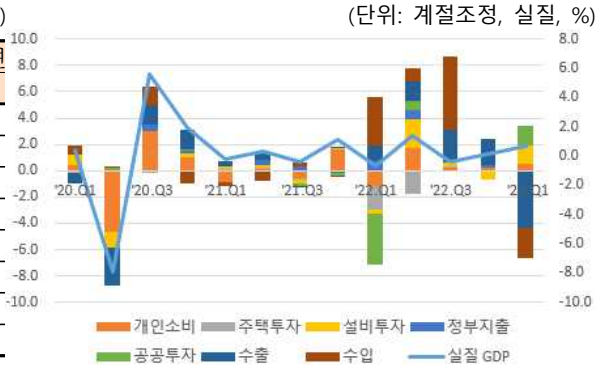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1년	'22년	2021년		2022년				'23년
			3/4	4/4	1/4	2/4	3/4	4/4	1/4
실질GDP	2.2	1.0	-0.4	1.2	-0.7	1.4	-0.4	0.1	0.7
개인소비	0.4	2.0	-1.1	3.1	-1.1	1.7	0.1	0.2	0.5
주택투자	-1.1	-4.6	-1.3	3.9	-1.8	-1.8	-0.5	0.1	-0.1
설비투자	0.8	1.8	-1.7	-1.3	-0.3	2.2	1.5	-0.6	1.4
정부지출	3.5	1.5	1.3	-1.1	0.7	0.7	0.0	0.2	0.1
공공투자	-1.9	-7.0	-3.2	-3.0	-3.8	0.7	0.9	0.0	1.5
수 출	11.9	5.1	-0.4	-1.5	1.2	1.5	2.5	2.0	-4.2
수 입	5.1	8.0	0.5	0.4	3.7	1.0	5.6	-0.0	-2.3

자료 : 內閣府(2023. 6. 8).

< 그림 1. 일본 GDP 구성항목별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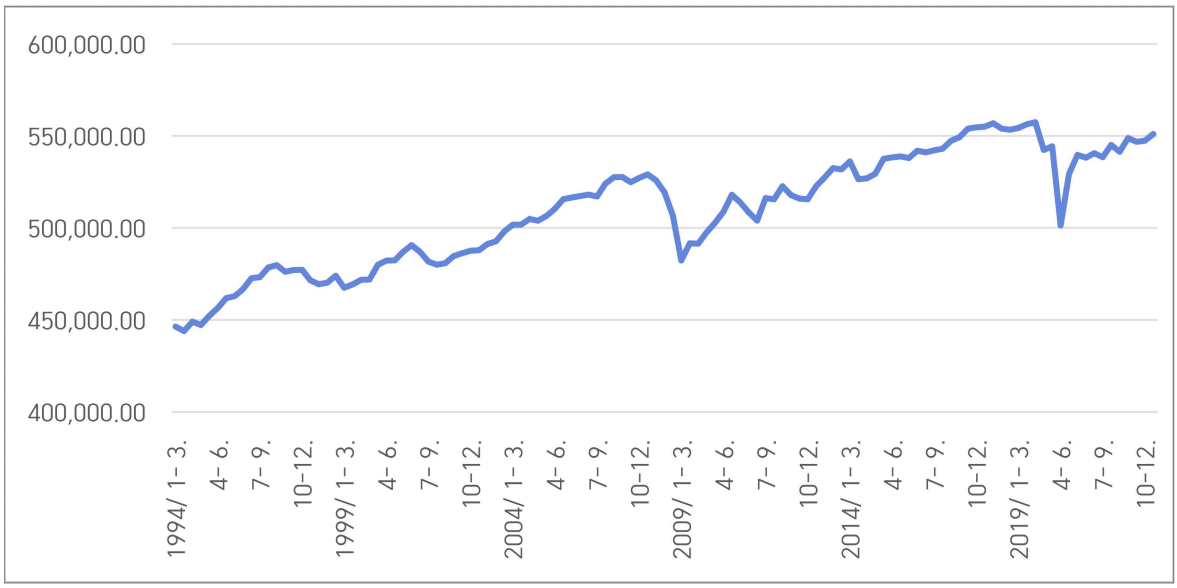
(단위: 계절조정, 실질, %)



자료 : 內閣府(2023. 6. 8).

< 그림 2. 일본 GDP 장기추이 >

(단위: 분기별, 계절조정, 실질, 연율환산, 10억엔)



자료 : 內閣府(2023. 7.5).

□ (평가) **일본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시기상조**

○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임금*****은 **감소**

* 명목임금 상승률은 아직 전 산업 기준 평균 3%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 유지로 근원 CPI(신선식품 제외)는 3% 중반 수준('23.4 3.5%)

*** 23.4 후생노동성 "매월노동통계", 4월 실질임금 전년동월대비 3.0% 감소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지속, 원인은 명목임금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록('23.4 기준)

2. 금융시장

※ '22년 초부터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4월 말 이후 주가 상승 추세

□ **(환율)** 현재 **달러당 130엔 후반~140엔** 수준의 **엔화 약세** 국면 **지속**(그림 2 참고)

○ '22년 초반부터 **미·일간 금리 격차 확대***로 **엔화 약세** 진전

* '22년 초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일본은행은 여전히 금융완화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금리 격차가 점차 확대

☞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는 –0.1%로 고정하고, 장기금리는 0%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최대 상승폭을 0.5%까지 허용하는 '장·단기 금리조절' 정책을 시행중

□ **(주가)** 4월 이후 **닛케이 225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3만** 선을 **돌파**(그림 3 참고)

○ **닛케이 225 주가**는 33,388.91('23.6.20 기준)로 **1990년 이래 최고 수준**

-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❶금융완화정책 지속, ❷자사주 매입 확대, ❸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증대, ❹기업실적 개선** 등

* ❶ 신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완화지속을 시사하여 수출기업 실적 개선이 기대

❷ 도쿄증권거래소가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에게 주가를 부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이후 상장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대폭 확대(5월 1개월간 총 3.2조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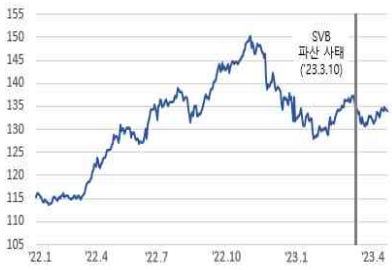
❸ [1]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중 마찰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연구거점을 설립중 [2]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투자 확대

❹ 23년 1/4분기에 주로 해운·종합상사 관련 기업 실적이 개선되어 관련 기업 투자 증대

□ **(금리)** **금융완화정책 지속**으로 **장기금리**가 **0.4~0.5% 수준**에서 횡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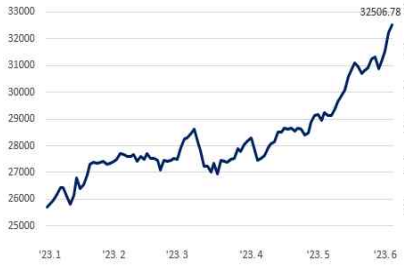
○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의 **용인폭**을 **±0.25%** → **±0.5%**('22.12)까지 **확대**한 이후 추세 **유지**(그림 5 참고)

< 그림 3. 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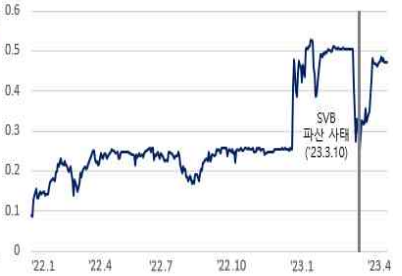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검색일: 2023. 6. 21)

< 그림 4. 닛케이 주가 추이> (단위: 엔)



자료 : Bloomberg(검색일: 2023. 6. 21)

< 그림 5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단위: %)



자료 : Bloomberg(검색일: 2023. 6. 21)

아주 시론

일본경제 부활?… 日국민은 달갑지 않은 이유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달리 국가가 주식 권장… 장롱 속 여윳돈 투자 유도 분위기
환율·주가 상승이 인플레 견인… 라면 한 그릇 600엔에서 900엔으로

일본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경제는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경제상황이 남들의 관심을 끌 만큼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면교사로서 관심을 받아왔다. 즉 일본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다. 일본으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경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받는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일본경제에 긍정적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가상승이다. 일본 닛케이 225 주가는 2023년 4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3만3000엔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는 1990년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여 일본인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과거 1980년대처럼 주가상승을 이유로 명품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술집들이 성업하는 상황이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일본인들은 과연 자신의 현재 생활과 나아가 미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연일 신문과 방송을 뒤덮고 있는 주가상승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주가가 상승한 첫째 이유는 일본은행이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년에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 하나는 강력한 금융완화였다. 이러한 금융완화 기조는 기시다 정권에서도 지속되었고 최근 우에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부임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일본경제의 총수요가 총공급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 수 있는 수준이며 환율이 올라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하니 굳이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여 일본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 정부의 이자상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해진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주가가 상승하는 둘째 이유는 기업이 주주를 더 중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주주 이외에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이익도 존중해 왔다. 대표적인 이해당사자가 바로 종업원이다.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장으로서 종신고용이 정착되었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제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업원 우대정책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업정책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만성적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까지의 일본 주식 저평가의 배경이라고 보는 것 같다. 따라서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환원하는 기업전략을 통해 저평가된 일본의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는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에게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했다고 한다. 5월 한 달간 무려 3.2조엔을 매입하였다. 일본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성이 발표하는 법인기업통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 등을 뺀 사내유보금의 누적액은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 약 200조엔, 2010년에 약 300조엔, 2021년도에는 약 516조엔에 달하였다. 내부유보율(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를 제외하면 5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도의 내부유보율은 52.6%였다. 일본기업의 이익률도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990년대 1~2% 정도였으나 2021년에는 5.8%까지 상승하였다.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온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기업도 풍부한 현금과 이익실현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의 주식투자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장롱 속에 쌓아둔 여유자금 받는 이자보다 내는 수수료가 더 많은 은행통장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라도 해서 수익을 내라는 정책이다.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정반대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몰려오고 국내적으로 여윳돈과 금융지식 그리고 투자할 용기를 가진 능력자들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일본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익율 보는 자의 반대에는 손실을 보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일본의 물가상승 속도는 국제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수도권이 아닌 어느 지방 도시권의 물가 사례를 보면 식당에서 사 먹는 라면 한 그릇이 600엔에서 900엔으로, 낫또 한 팩은 100엔에서 130엔으로, 5개 들이 라면 한 박이 198엔에서 무려 350엔으로, 맥도널드 점심이 500엔에서 650엔으로, 요시노야의 규동이 340엔에서 450엔으로, 편의점 오니기리(삼각김밥)가 110엔에서 180엔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상승률이 30%로, 임일이 얼거를 필요도 없이 일반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면에 주식으로 돈을 벌 여유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심질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임금상승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기업의 주인으로서 주주는 좋아할 일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결국 최근 나타난 일본의 주가상승은 일본기업의 현금보유능력과 이익률 증가라는 실물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경제정책의 효과, 즉 금융완화 효과가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완화로 인하여 발생한 영끌과 벼무의 처참한 부작용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의 일본 상황에 훈수를 둘 자격이 없는지 모른다. 그러고 그동안 실력에 비해 저평가된 일본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돈 풀기로 얻은 자산 가격의 상승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과연 금년 하반기 일본 주식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 연구과 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합성데이터 생산하는 '데이터 팜' 구축해야

챗GPT로 촉발된 초거대 인공지능(AI)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국가나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인공지능은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고도화에 있어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다.

한국인은 흔히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쌀이 한국인의 삶에 있어 기초 생필품이라면 학습데이터는 바로 인공지능의 쌀이다. 학습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풍부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 부족 현상은 한층 심화된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다.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구(EDPS)는 합성데이터에 대해 원본데이터 특성과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대상 모델 및 원본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인공데이터로, 합성데이터와 원본데이터가 동일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경우 매우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즉,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대량 생산하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기술이다. 이를테면 철수와 영희의 카드 이용 내역을 학습해 가상의 인물인 밥(Bob)과 앨리스(Alice)의 카드 이용 내역을 만들어내는 식이다.

합성데이터 생산기술을 이용하면 다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팜(Data farm)을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 팜에 원본데이터의 싹앗을 뿌리고, 생산된 합성데이터 중 선별하여 학습데이터로 공급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합성데이터는 금융권에서 특히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의 데이터는 고객의 재산, 신용 및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유출은 물론 오남용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성데이터가 이 같은 부작용 우려를 해결하는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온라인 상에서는 가짜 오바마 영상이 유튜브에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세간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외양이 흡사한 닮은꼴의 등장이 아닌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 때에도 인공지능 기술(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이용됐다.

기술적 혜경이 동일한 합성데이터 또한 이와 같이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사용해 합성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 그 특성과 패턴으로 원본 신용정보가 유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본데이터를 재식별해 낼 가능성이 충분히 낮은지, 즉 합성데이터의 익명성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보안기관의 역할이다. 금융권에서 인공지능·데이터·정보보호 전문성을 가진 금융보안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팜을 운영해 양질의 합성데이터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금융권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다면, 금융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들은 초개인화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GIGO: Garbage In, Garbage Out)'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가 사용되면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 역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권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학습용 합성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팜 구축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박진석
금융보안원 디지털전략본부장(상무)

INSIGHTERS

아주 시론

나홀로 통화완화… 기로에 선 일본은행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완화 기조 유지로 장기금리 상승 압력 낮아졌지만, 국채 매입 규모 사상 최대치
美·日 금리격차 확대·8개월 연속 물가 상승… 시민경제·채권시장 불안감 높아져

요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들이 모두 긴축을 단행한 것과 달리 일본은행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끄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은 과연 언제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완화적인 정책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들이 모두가 궁금해 하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 2022년 12월에 단행된 정책 변경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발작적인 반응은 이러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글로벌 긴축 속 통화정책 '딜레마'

일본은행은 2022년 12월 20일에 이른바 수익률곡선관리정책(YCC·Yield Curve Control)에 일부 변화를 주었다. 즉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은 0% 수준을 유지하되 변동 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하였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였고 이후 국채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이어졌다. 변경된 수익률 범위 안에 금리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금년 1월 국채 매입액은 월별 단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7000억엔에 달하였다. 이는 2022년 6월 16조2000억엔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다만 2023년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완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이후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은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현상 유지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최근 8개월 연속으로 목표치 2%를 상회하였다. 석유 및 가스요금 상승과 이에 기인한 각종 소비재 가격의 상승이 국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어서 완화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도 물가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전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일 간 금리 격차도 확대되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의 금리 스프레드는 400bp 가까이 상승하였고 이는 엔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였다. 2022년 10월 엔·달러 환율은 150엔을 초과하였고 연초에 비해 30% 이상 엔화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은 당연히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민 생활을 압박한다.

이러한 상황을 일본은행이 계속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은행은 아직 수요 회복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당분간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과 기업이 느끼는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어서 일본은행으로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즉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은 틀림없다. 앞으로 어떠한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궁금해진다.

사실 일본은행은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리를 올리자니 실물경제와 재정 리스크가 걱정되고 현상을 유지하자니 일본은행의 기형적 자산 보유나 채권시장의 왜곡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걱정된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2012년 제2기 아베 정부가 등장하면서 크게 변화되었는데 이른바 양적·질적 완화정책이 도입되면서 국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식까지도 사들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 확대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기 국채에 대한 일본은행의 보유 비율은 53.5%(2013년 3월 11.5%)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비율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보유 자산 규모는 GDP 대비 127.7%(2022년 말 기준)로 미국 연준(33.9%), ECB(64.4%), BOE(38.6%)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크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의 발권력에 안주해 왔다. 이미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구 노력을 하는 대신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매년 재정 규모를 확대해 왔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화 달성 시기를 끊임없이 뒤로 미루어 왔다.

日 재정건전화, 20년째 제자리걸음

필자는 이미 20년 전부터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화 목표에 대한 논의를 보아 왔지만 늘 그 목표는 단순히 목표치였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지 못했다. 그 어느 정치인도 재정 규율의 강화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은 또 이런저런 핑계로 이를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매입해 왔다. 그 결과가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일본은행의 막대한 자산이다. 그리고 채권시장은 가격 기능을 상실하였고 불확실성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작은 부상돌의 튕김이 엄청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본래 이러한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2012년 12월에 도입된 양적 완화 정책은 당시 출범한 아베 정부의 세 개의 화살 중 하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정책은 원래 환율과 자산시장의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도입된 것이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그 효과로서 일본 기업의 수출 확대와 수익 증가를 기대하였다. 기업의 수익 증가는 투자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물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업의 수익은 증가하였고 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것이 투자와 임금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돈 풀기를 통해 주가는 상승하였으나 이 또한 기업 활동, 소비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를 모두 금융정책의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안주하여 더 중요한 경제 체질 개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BOJ 통화정책 부작용 반면교사 삼아야

일본은행은 현재 딜레마에 놓여 있다. 금융 긴축으로 선회하면 재정 리스크가 증가한다. 재정 규율에 소홀했던 정부에 대한 대가다. 일본은행에도 손실이 예상된다. 막대하게 보유한 국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완화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더욱 키울 뿐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러한 딜레마 속도로 금융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금리 상승의 긴축 과정에서 비대해진 자산 버블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나라 경제주체, 특히 자산 버블 붕괴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젊은 세대의 소비와 투자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실물적 여건하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완화적인 금융정책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금융 완화 의존적 정책은 민 피해에 과도한 정부 부채와 중앙은행의 기형적 대차대조표를 우리에게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자금 이동을 통한 단기적 영향보다 더 중요한 교훈, 즉 발권력에 의존한 방만한 재정과 금융 완화의 경기 회복 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우리에게 더 큰 짐을 남길 수 있다는 교훈이다. 우리는 돈의 함이 아니라 사람과 지식의 힘을 더 믿어야 한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 연구과 경제학 박사

전문가 기고

철도 서비스 산업, 합리적 경쟁 환경 만들어야

정부는 2013년 철도 서비스의 합리적 경쟁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2 철도 운영사인 수서고속철도(SR)를 설립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운영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외에 다른 철도 운영자가 철도 서비스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철도 경쟁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SR 설립 이후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쟁 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국민 혜택 증가'를, 통합이 필요하다는 측은 '안전과 운영·유지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두 주장에 대하여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수요자와 운영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 혜택 증가'를 보자.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가며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유사한 서비스 수준에서 플랫폼이 더 저렴한 요금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상황에서 오송~부산 구간이 KTX 4만2200원, SRT 3만7200원으로 SRT가 KTX보다 13.4% 저렴하다. KTX 구매 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을 고려하더라도 그 혜택은 여전히 7.8%로 크다.

최근 5년 동안 SRT 이용객의 할인 혜택은 연평균 565억원(매출액 기준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만 적용)으로 많은 이익이 수요자에게 넘어갔다. SRT가 실행하고 있는 그 외 할인제도, KTX의 운임 할인과 5% 마일리지 등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받은 혜택은 이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둘째, 운영자 관점에서 '안전과 운영·유지의 효율성' 측면을 보자. SR 차량정비, 시설 보수 점검 등 철도 유지보수와 안전에 대한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고 위험성 증가와 불필요한 중복 비용 발생 요인으로 운영 통합 필요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고 장애 건수는 100만열차 KTX 1.32건, SR 0.8건으로 SR 운영사가 낮게 나타났다. 중복 비용 또한 철도노조에서 연간 406억원을 주장하지만 SR가 국가에 납부한 선로사용료(국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개념)를 놓고 본다면 중복 비용보다 이익이 10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SR는 50%, KTX는 34%를 선로사용료로 정부(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한다. 실제로 SR는 개통 이후 5년간 선로사용료 1조2709억원을 납부해 16% 차이를 감안할 때 4066억원의 이익을 정부에 안긴 셈이다.

또 통합 논란과는 별개로 철도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 이후 성숙한 경쟁 체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경쟁이란 품질과 서비스 수준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제에서 제한 없이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선별로 철도 운영자가 다르므로 실질적인 철도 경쟁 체제라 볼 수 없다. 즉 수서역에서 KTX가, 서울역에서 SRT가 함께 공정하게 운행될 때 최소한의 철도 경쟁 체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동일 선로에서 다수 회사가 운영되는 것과 같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단지 운임이 10% 저렴해서 SRT를 선택했다가보다 수서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선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철도 운영자별로 노선별 운행 제한을 두기보다 경쟁 체제에 맞도록 제한된 선로 용량 내에서 다수 운영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효과를 판단하고 경쟁과 통합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철도시설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도 법률에서 정한 철도 건설과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정한 철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한 구조는 당초 철도시설과 철도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 분리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광탄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SR 운행 차질에 대한 SR 측 입장문을 보면 코레일에 대한 위탁을 탈피해 독자적 운영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겠다고 했다. SR는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차량 임차·정비, 여압밸브시스템, 콤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코레일에 위탁해 운영되는 구조다. 사고 대응과 사후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로 인해 SR가 '독자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국민이 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는 개별 기업 혹은 기관의 편중된 의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편리성에 저해되는 요인을 철저히 발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때 보장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 경쟁 체제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때 국민과 국가에 더 큰 편익을 돌려주고 철도 서비스 산업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

Ⅱ. 주요 분야별 이슈

1. 통화(금융완화)

※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금리조절 등을 동원하여 금융완화정책을 추진중

□ (현황)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탈피** 및 **2%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상승**을 **목표**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추진중('13.3~)

○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채·위험자산**(ETF, J-REIT) **매입***, **마이너스 금리****, **장·단기 금리조절***** 등 거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표 2 참고)

* 연간 매입 증가량을 국채 80조 엔, ETF 6조 엔 정도 수준까지 확대(본원통화 확대)
** 시중은행들이 일본은행의 당좌에 예치하는 금액 중 일부에 –0.1%의 금리 부과
*** 단기금리(정책금리)는 –0.1%로 고정하고, 장기금리는 0% 수준으로 유도
☞ 금리조절: 국채 매입이 한계에 이르자 매입량을 줄이면서도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도입
☞일본은행 총자산 규모(23.3월 말), **735조 1,165억 엔**으로 과거 최고였던 '22.3 규모와 거의 동일 수준, 이 중 국채가 576조 엔으로 78% 차지, 장기금리를 0%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채매입을 지속한 것이 원인

○ **'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를 **초과**하고 **정책**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되었음에도 당분간 **현행 기조 유지** 예상

- 일본은행이 2% 물가목표 달성에도 양적완화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① 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는 점,
  ② GDP 갭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를 뒷받침할 유효 수요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점,
  ③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를 초과하고 세출의 30%가 국채비용으로 소진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향후 재정리스크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
  ④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 특성상 향후 대외경제가 침체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 등이 주로 거론

* 수익률 곡선 왜곡(국채금리 역전),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일본은행 자산 팽창 등
** '23.4월 구로다 전 총재의 임기 만료(약 10년) 후 우에다 신임 총재로 교체

< 표 2. 금융완화정책의 주요 추진 경과 >

일시	정책의 주요 내용	비고
'13.4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도입	국채 연간매입 증가량 50조 엔
'14.10	추가 금융완화정책 도입	국채 연간매입 증가량 80조 엔
'16.1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정책금리 -0.1%
'16.7	추가 금융완화 실시	ETF 연간 매입증가량 6조 엔
'16.9	장·단기 금리조절(YCC 도입)	장기국채 금리를 '0% 수준으로 단기금리는 -0.1%로 고정
'18.7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 확대	±0.1% 정도 → ±0.2% 정도
'20.3-5	자산매입 확대, 신규자금공급 등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21.3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 확대 등	±0.2% 정도 → ±0.25% 정도
'22.12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 확대	±0.25% 정도 → ±0.5% 정도
'23.4	정책금리 관련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	우에다 신임총재 취임 등

자료 : 日本銀行.

< 그림 6.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 総務省　統計局(2023)

□ (전망) **일본은행**의 정책 변경은 '23년 **하반기 임금인상**과 **가계소비, 대외경제 여건**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

○ 다만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여 정책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은 **비대해진 밸런스시트의 축소**를 목표로 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

2. 재정(재정건전화)

※ 코로나19·고물가 대응 등을 위해 추경을 반복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
☞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추진 동력 약화 우려 및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불투명

□ **(재정정책)** 일본 정부는 2022년 **총액 31조 6천억 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

○ '21년부터 **코로나19·고물가 대응**을 위해 **총 3차례 경제대책**을 **책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표 3 참고)

□ **(현황)**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그림 7 참고)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 : **5.5%**('21) → **8.8%**('22)
GDP 대비 장기채무(정부부채) 비율 : **225%**('22)까지 확대

< 표 3. 기시다 내각의 경제대책 및 추경 규모 >

일시	경제대책 및 주요 내용	추경 규모
'21.11	**'코로나19 극복 및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 ☞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장전략, 분배전략, 위드코로나 하의 사회경제활동 재개, 재해방지 및 국토강인화 등	35조 9,895억 엔 (신규 국채발행: 22조 580억 엔)
'22.4	**'원유가격·물가상승 등 종합긴급대책'** ☞ 원유가격 상승 대책,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안정 대책,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 생활 궁핍자 지원, 공공사업 실시 등	2조 7,009억 엔 (신규 국채발행: 전액)
'22.12	**'고물가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 물가상승 대처, 재해방지 및 국토강인화 등	28조 9천억 엔 (신규 국채발행: 22조 8,520억 엔)

자료 : 內閣府(2021, 2022) 및 KIEP(재인용)

< 그림 7. GDP 대비 장기채무 및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 추이 >

주1 : 2021, 2022년은 추정치임.
주2 : 장기채무는 중앙,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통합 수치임.
자료: 財務省(2023), 內閣府(2023) 및 KIEP(2023) 재인용.

□ **(전망)** 현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시절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고수**하고 있지만, **세출**의 **지속적 증가**로 달성 가능성은 **불투명**

○ 재정건전화 목표 : ①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흑자 전환**('25까지)
② **GDP 대비 정부부채 잔액**을 **안정적 수준**으로 **인하**
('18, 내각부, '新경제·재정재생계획')

☞ 내각부 시산에 따르면 ❶추가 세출 없이 ❷실질 GDP가 연평균 2% 성장하여도 2025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 수준일 전망('23.1 기준)

3.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 일본 정부는 자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중

□ (주요 정책)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주로 '**공급망 강화**'로, 이를 위해 ① **공급망 다변화**, ② **반도체 전략**, ③ **경제안전보장추진법**, ④ **공급망 국제협력** 등을 실시중

○ (공급망 다변화) **국내투자촉진사업**(리쇼어링)*, **해외공급망 다원화**** 추진

* 일본 내 제조업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와 중국발 공급망 단절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생산거점 등을 국내로 회귀하고자 하는 중국소재 일본기업을 지원

☞ ① 국내 생산설비 등 투자 비용 지원 (보조율 : 대기업 1/2, 중소기업 2/3)
② 의약품 리쇼어링 지원 (보조율 : 대기업 2/3, 중소기업 3/4) → 293 건의 사업 지원('22.12 기준)

** 대중 의존도가 높은 수입 제품(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소재 일본기업이 ASEAN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경우, 이를 지원

☞ 지원 대상: 실증 사업, 설비 이전, 타당성 조사 (보조율: 중소기업 2/3 최대, 대기업 1/2)

○ (반도체 전략) ❶**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❷**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❸**반도체 기술**의 **그린 이노베이션**, ❹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 재생**, ❺**국제전략** 추진

* ❶ 일본 국내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산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 유치

☞ 결과: TSMC 유치 ('22.4 착공, '24.12 가동 예정, 로직반도체 생산라인 구축)

❷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 기술개발 프로젝트,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프로젝트,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개발 등 3가지로 구성

❸ 전력 반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육성하여 반도체 기술의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

❹ 외국 파운드리 제조업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노후화된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교체

❺ 공급망 실태 파악, 미국 등 동지국(유지국)과의 산업정책 협력 강화 등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❶**중요 물자**의 **공급망 확보***, ❷**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❸첨단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❹**특허출원 비공개**로 구성 ('23.3부터 단계적 시행)

* 공급망 확보 : 크게 공급망 조사(중요물자 조달, 공급현황 파악),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 및 승인,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으로 구성

☞ 중요물자 :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영구자석,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

○ (공급망 국제협력) **쿼드·IPEF**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강화** 등을 도모 → 현재 **호주** 등과 **광물자원** 관련 **협력** 추진

淸音淡論

INSIGHTERS

아주 시론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년…
'기술경쟁' 대대적 채비 나선 기시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경제안보 중심 新국제질서… 지금 우리 우방은 어디인가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23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태를 촉발시킨 대외적 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불러일으킨 직접적 요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누적된 역사적 갈등이었지만 사야를 더 넓혀보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의 약화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혼돈이 그 배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이를 압도하려는 미국의 한판 싸움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미국의 동맹인 일본은 미국이 상대국을 제압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보았고 그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을 그 첫 시험대상으로 삼았고 그 결과가 2년 전에 벌어진 양국 간 극심한 갈등이었다. 이러한 양국 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대외적 여건이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맹국과 협력한다는 日 경제안보전략

2021년 10월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지명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하나로서 '경제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향후 10년간 외교 및 국방 이념과 기본방침을 정한 것이 바로 '국가안보전략'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여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먼저 기시다 내각에 경제안보담당장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초대 경제안보담당장관으로 고바야시 다카유키씨가 임명되었는데 고바야시 장관은 3선의 46세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자민당 의원시절부터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조회장 시절, 경제안보를 논의하는 당 조직인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의 사무국장을 고바야시 장관이 담당하고 있었다. 여기에 또 한명의 인물, 즉 자민당 간사장인 아마리 아키라씨가 등장하는데 아마리 간사장은 당시 전략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안보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 당의 핵심요직인 간사장과 신설된 경제안보담당장관으로 발탁되면서 향후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들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같이 시사되었다.

일본의 내각관방은 총리를 보좌하고 일본 전체의 전략을 짜내는 핵심기구이다. 총리 보좌관과 각종 현안을 다루는 조직들이 즐비한 중요 조직인데 여기에 고바야시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관련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조직은 내각관방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국(NSS)이며 경제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은 국가안전보장국에 설치된 경제반이 담당해 왔다.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직은 이 경제반에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여타 정부부처의 인력을 추가하여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이를 고바야시 장관이 지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은 전통적인 외교안보분야의 조직과 경제분야 조직을 합친 새로운 경제안보 사령탑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 조직이 과연 잘 돌아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외교안보분야와 경제분야의 정부조직이 서로 다른 권한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정부조직이 하나의 융합된 조직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경제안보담당장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질적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녹여내고 경제안보정책의 리더로서 정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토대를 정비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에 치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시다 총리의 약속을 이어받은 고바야시 장관은 상기 법안을 내년 1월의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자민당 시절 아마리 간사장과 고바야시 장관이 제시한 제안(금년 5월)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도 가시화되고 있다. 아마리 간사장은 지난 10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안보법안에 특허공개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는 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악용되어 일본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데 특허법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기술독립 야렵다면, 한일 관계개선 나서야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대학은 사전에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가장 중요한 타깃이 중국 유학생들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외국 유학생들 중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외국정부가 보조할 경우 '외국의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 대학의 연구에 참여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첨단기술개발기금을 창설하겠다는 정책도 나왔다.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 보유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추경예산으로 1000억엔 규모의 기금을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와 JST(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이 풍부한 연구자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보인다. 주로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이 지원대상이며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동맹국 및 동지국과만 공유'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한 보조금도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의 유력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일본의 구마모토에 유치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201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유치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TSMC가 생산한 반도체는 바로 인근에 있는 소니의 화상이미지센서 공장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니는 화상이미지센서에서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TSMC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업청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추경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보조금 제도는 향후 정부의 연례진정제도 도입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가 보기에 생산능력, 기술력, 안전보장 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정하고 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제1호 인정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은 불과 요 몇 달 사이에 발생한 것들일 뿐이다.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다양한 조치들은 여기에서 알맡이 언급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이런 조치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사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이런 조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일본이 대대적으로 체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동맹국, 동지국에 과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투명하다.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의 이공계 대학에서 연구를 하려 할 때 일본의 대학이 한국학생의 유학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기술경쟁이 차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일 경제관계가 정경일치와 경제안보로 치닫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기술독립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활용 가능한 기술이 있다면 관계개선을 통해 써먹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경제안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하나라도 더 많은 우방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한·일관계의 개선이 시급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특별기고

수교 30주년 앞둔 한·중, 더 나은 미래 함께 만들자

최근 중국은 경제 발전, 녹색 생태, 개방적 협력, 스포츠 행사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성과로 한국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 '15', '50', '100', 네 개의 숫자로 이를 요약해본다.

첫째, 을 들어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성장해 세계 경제 회복에 확실성을 불어넣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1-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9.8% 성장해 목표치인 6%를 웃돌았다. 현재 중국 경제는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준이고, 고용 상황도 안정적이며, 소비 수요도 회복되는 중이다. 안정적인 산업 구조 조정 노력 속 기업의 질적 성장도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비록 코로나19가 기승하고 해운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과 외자는 여전히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 1-3분기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외자 유치도 전년 동비 19.6% 증가했고, 그 중 하이테크 산업의 외자 유치는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로 예상했다. 아는 세계 평균은 물론, 주요 경제국 성장률보다 높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는 강한 근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고 전 세계 경제 부역의 회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중국은 15억 위안(약 2750억원)을 투자해 생물다양성기금을 설립하고 자구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 정상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연대를 강화해 녹색 발전 방식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경제와 환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자구의 터전을 만들 것을 호소했다.

또 중국이 앞장서 15억 위안을 투자해 생물다양성기금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점 분야와 업종의 탄소 배출량 정점 실시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조치도 발표해 산업 구조와 에너지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도 밝혔다. 중국은 글로벌 리스크의 도전에 대응하고 자구생명공동체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 중국의 책임과 지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신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며 중국과 유엔의 협력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1971년 10월, 제 26차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제 2758호 결의가 통과돼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임을 인정해 중국과 유엔 협력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은 유엔 사무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사업을 지지해왔다. 또 세계 평화 수호의 책임을 다하고, 공동 발전 촉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특별한 공헌을 했다.

올바 전 시진핑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중국이 유엔 사무에 참여하고 유엔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젠다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이 향후 3년 이내에 30억 달러(약 3조원)의 국제 원조를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발역과 경제사회 발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서,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유엔 현장'의 취지와 원칙을 계속 실천하고, 세계 평화의 중요한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최대 공헌자, 국제질서의 확고한 수호자가 돼 유엔의 숭고한 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넷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와 마지막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세계에 겁소하고 안전하며 다채로운 올림픽을 선사할 것이다.

올바 전, 동계올림픽 성화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베이징은 이제 세계 최초로 하계·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될 것이며, 전 세계에 맺진 '빙설 축제'를 선사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줄곧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시 주석이 재안한 '녹색, 공유, 개방, 청렴'의 4대 올림픽 주최 이념은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을 관통하며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다.

36명의 중국인이 빙설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동계 스포츠와 올림픽 스포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전 세계 동계스포츠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빙설스포츠, 더 나아가 세계 스포츠 발전에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스포츠 정치화에 반대하며 더 단합된 새로운 올림픽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다. 한국은 경제, 스포츠, 국제 다자외교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과 양호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발전은 양국이 다음 단계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는 '중·한 문화교류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며, 내년이면 중·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중국은 한국과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서로 화합을 이루며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청언과담론

4. 노동(노동개혁)

※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주로 정책의 초점을 두고 노동정책 추진중

□ (기존 정책)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규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임금 인상, 탈시간급 제도** 등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 (노동시간 규제) 원칙적으로 **월 최대 45시간**까지 **초과근무 허용***

* 임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하에 연간 720시간까지 허용
최대 상한선은 1개월에 100시간 이내, 2~6개월에 월평균 80시간 이내 허용
단, 어디까지나 연간 720시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월 초과근무 시간을 45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한 기간은 연간 최장 6개월까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기본급, 성과급, 복리 후생, 각종 수당 등에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균등 대우**하도록 권고

○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명목임금 3% 인상** 권고

○ (탈시간급 제도) **고액 연봉자**(연수입 1,075만 엔 이상)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폐지**

* 대상 업무 : 금융공학 관련 신상품 개발업무, 애널리스트 업무, 경영 컨설팅 업무 등

□ (신규 정책) 최근 일본 정부는 **근로자 주도**의 **재교육**, 기업의 실태에 맞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원활한 노동이동** 추진 등의 개혁 방침 제시('23.6, 내각부)

○ (재교육)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훈련 급부금 확충, 교육훈련 중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부금 및 대출제도 신설 등을 검토

○ (직무급제) 직무급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의 **인재 배치·육성·평가**방법, **재교육** 방법, **임금제도,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한 **사례 정리**(중소·영세기업 포함) → 연내 사례집 발간

○ (노동이동) **자발적 퇴직**시에 적용되는 **퇴직금 관행*** **개선** 촉구

* 현 기업 관행은 근속기간이 짧을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

5. 인구(저출산 대책)

※ 최근 일본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세대 지원을 강화한 종합대책을 발표

□ (배경) **'22년 출생아가 80만 명을 하회**하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그림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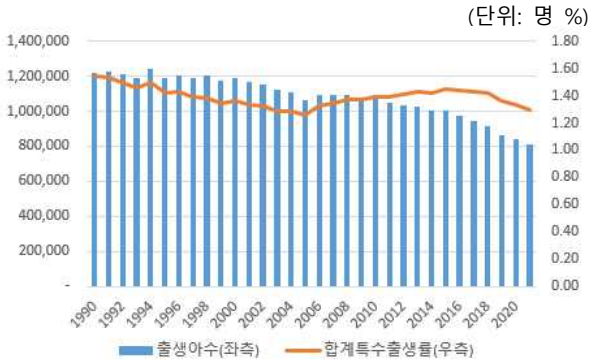
○ '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저출산 관련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지만,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는 **미흡**(표 4 참고)

< 표 4. 기존 주요 저출산 대책 >

시기	주요 대책
'99.12	저출산대책추진 기본방침
'01.7	일과 양육의 양립 지원 방침
'04.6	저출산사회대책 대강(大綱)
'10.1,'12.8	어린이·양육비전
'14.12	장기비전 종합전략
'16.6	일본 1억 총활약 플랜
'18.7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20.12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침
'21.12	어린이 정책의 새로운 추진에 대한 기본방침

자료 : 內閣府(2023).

< 그림 8. 출생아수 및 합계특수출산율 추이 >



자료 : 厚生労働省(2023)

□ (주요 정책) 일본 정부는 '23.6월 ❶**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 강화**, ❷모든 **어린이·육아 세대 서비스 확대**, ❸**일하는 방식 개혁** 등 주로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제정(내각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 (경제적 지원) **자녀수당 수급**을 위한 **부모**의 **소득제한 철폐**, **수당 지급기간 연장**(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육아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마련, **다자녀 세대**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등

○ (서비스 확대) 임신기부터 출산·육아까지 '**동반형 상담지원**'을 제도화, **보육사 배치 개선***, **시간 단위**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 보육사 1인당 돌봄 아동수를 아동 연령별로 1세 5명, 4~5세 25명 등으로 축소
**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시간별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

○ (일하는 방식 개혁)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근무방식**의 **유연화** 추진**, **근무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제도 확충 검토, 육아휴직시 급여율 인상 등
** 3세 이상~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부모에 대해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등의 적용 검토
***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확대 검토 등

6. 조세(세수 확보)

※ 방위비,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을 위해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중

□ **(현황) 아베 전 내각** 시절 **법인 실효세율 인하, 소비세율 인상** 등을 실시

○ **(법인세 인하) 기업의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단계적 인하**(표 5 참고)*

* ('14) 34.62% → ('15) 32.11% → ('16) 29.92% → ('18) 29.74%

< 표 5. 법인세율 및 법인실효세율 추이 >

(단위: %)

	2014년도(개정 전)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법인세율	25.5%	23.9%	23.4%	23.2%
거대법인 대상 법인사업 소득 산출 비율 * 지방법인 특례세 포함 * 연간 800만 엔 초과 소득분의 표준세율	7.2%	6.0%	3.6%	3.6%
국가, 지방의 법인실효세율	34.62%	32.11%	29.97%	2974%

자료 : 財務省

○ **(소비세 인상) 사회보장비 충당**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인상*

* ('14.4) 5% → 8%, ('19.10) 8% → 10%

○ **(개별소득세)** 10.5%(최저)~70%(최고), 세율 구간 15단계

□ **(개편 논의) 방위비** 및 **사회보장비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소득세 및 소비세율 인상** 논의 진행중

○ **(방위비) 방위비 증액** 관련 법률 통과*('23.6), **5년간 14.6조엔 증액**

* 중국 등의 역내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가안보전략 등 3개 문서 확정('22.12), 이를 위한 방위비 증액 법률안을 마련하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 **(사회보장비)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비 팽창**, 기시다 내각의 **저출산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 현재 논의 사항 : 개인의 사회보험료에서 월간 3,000엔 정도를 추가 징수
소비세율을 12%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

7. 한일협력

□ (반도체 공급망 협력) 2023년 3월, 일본이 2019년 7월에 실시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한 이후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

○ 금년 3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품목의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동년 7월, 한국을 그룹A국가(이전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 복원을 시행할 예정

- 불화수소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월 전월 대비 2배인 208억 달러, 3-5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비 2.2배로 증가

- 2019년 7월 이후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80-90% 급감했으나 현재는 2018년 대비 4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

- 향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수입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일본의 소재/장비 업체의 투자유치를 통해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중

- 코트라는 2023년 6월 15일, 도쿄에서 첨단소재/장비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140개 이상 일본기업 참여

- 한국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규모로 일본소재/장비업체를 유치하여 보다 탄탄한 공급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

- 다만, 한국은 여전히 소재장비의 국산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조달의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려 시도

* 2023년 "소재/장비 연구개발보조금" 예산, 1조 1,256억원(전년 대비 10% 증가)

□ (한일 통화스왑 재개) 2023년 6월 29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왑협정의 재개에 합의

○ 2015년 2월에 실효된 양국 통화스왑협정을 8년 만에 규모 100억 달러, 전액 달러 기반, 3년 간 시행할 것에 합의

○ 2001년, IM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한일통화스왑은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15년에 실효

○ 금번 통화스왑 재개는 양국 간의 경제금융분야 협력의 정상화를 상징한다고 해석 가능

○ 과잉부채와 긴축으로 인하여 누적되어 온 금융부실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100억 달러의 여력을 확보

○ 다만, 양국 모두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

□ (중요광물 해외 공동개발) **우리 정부는 IPEF의 다자간 공급망 협력 틀*을 활용**함은 물론 일**본과의 양자 간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필요

*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주요 중요광물자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대체제 개발

○ 협력분야는 일본이 지정한 상기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반도체, 배터리(소재·원료), 중요광물 분야를 예상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로서는 **특히 중요광물(리튬이온전지→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흑연, 영구자석→희토류)의 해외공동개발**에 대한 관심 필요

□ (수소에너지의 제3국 공동개발·조달) 한·일 양국 정부는 **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제3국 공동개발·조달 포함)에 관한 논의**를 개시 필요

○ 한·일은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도입에 지리적 제약이 지대하다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음.

* 2021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발전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7.5%, 10.3%에 불과

○ 한일 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79건)와 제조업 분야(9건)에서 제3국 공동 진출 사례가 풍부

- 최근에는 **한·일 기업의 수소·암모니아 분야 제3국 공동 진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2022.6월 GS에너지가 미쓰이물산과 공동으로 UAE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참여에 합의하였고, 2022.7월에는 롯데케미칼이 이토츄 상사와 수소·암모니아분야 협업에 합의

淸音淡論

2022년 9월 7일 수요일

23

INSIGHTERS

아주 시론

요동치는 국제정세… 한·일 경협 되살리기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美·中 패권전쟁 심화할수록 韓·日 전략물자 공급망 흔들
양국 FTA·통화스와프 등 멈춘 상황서 경제안보 협력 절실
과거사 문제 탈피… 달라진 산업구조 따른 공동이익 논해야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문제는 한 국가의 역사관에 입각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국민 정서나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복잡한 실타래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들어 간다. 한·일관계는 현재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는 결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먼저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계화 경향이 약화되고 지역화 혹은 블록화의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부패와 관련된 국제경제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이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4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폭우와 가뭄, 그리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대규모 태풍의 내습은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초미의 도전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 잘 적응하는 국가는 생존할 수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만큼 한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일 경제관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일 경제관계는 약화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2011년 14%에서 2021년 6.7%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12년 45.4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12.1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한·일 FTA협상은 2003년에 개시되었지만 2004년 11월에 무산되었다.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 산업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결과이며 이후 양국 간에는 FTA 관련 논의는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2022년 2월에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양허를 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흡하며 시장개방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1998년 50억 달러 수준으로 체결되었으나 2013년 30억 달러 계약을 종료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하에서 체결되어 있던 1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도 2015년에 종결되었다. 양국의 국제금융협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2022년 6월 현재 포토레지스트만 특정포괄허가로 전환한 상태에 있으며 화이트국가로의 복원은 미수용되고 있다. 다만 양국 무역은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한 강고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 대일수입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일수출에서도 중간재와 자본재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는 한·일 경제관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과 경제분야에서의 인도태평양전략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는 한·일 간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정부 주도로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물자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의 수출규제와 같이 상호 불신과 견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양국이 모두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전략물자의 공급망은 더욱 불안해진다. 두 나라 모두 반도체, 배터리, 식량, 에너지, 전략 광물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물자의 안정적 조달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양자 차원에서는 한·일 경제안보를 협의하는 정부 간 채널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 다자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나 쿼4(칭4) 등을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한·일 간 협력은 일본에도 유익할 수 있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G통신장비시장에서의 한·일협력이나 데이터센터의 한국 유치, 일본 클라우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한국의 대일진출 등 협력의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IT인력의 일본 취업 증가는 일본의 디지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클린에너지 분야 한·일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요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대규모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한·일 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양국의 협력도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국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국가이다.

국제정세는 날로 혐악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기업의 소부장 조달거점이다. 한국은 일본 소부장 산업의 중요 시장의 하나이다. 여전히 상호 윈윈의 여지는 매우 크다. 인도태평양전략에 기반한 공급망 재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행기이다. 함께 번영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 경제학 박사

전문가 기고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뻗어나가려면

지난 8월 31일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시범 개통돼 개통식을 가졌다. 추석 연휴 귀성길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진짜 도로는 아니지만,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나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형태에 맞춰 통합·중계해주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중계 허브시스템이다.

시범 개통에는 서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45개 병원이 우선 참여했지만, 앞으로 고속도로가 뻗어나가면 환자를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이어주는 마이데이터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의료와 ICT 융합의 핵심 기반은 바로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에게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국무총리 산하 e-Health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개별병원들의 정보를 표준화하고, 서로 쉽게 연결되도록 하려는 노력은 역대 정부마다 지속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의료기록, 우수한 ICT 기술력과 인력 등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의료데이터 활용현황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진료 정보의 표준화, 신약·신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연구 등 그간 의료데이터를 공유·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의료기관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속도로가 공식 개통되면 흩어져 있던 본인의 의료기록들을 병원에 일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데이터 활용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발병 전 식습관 조절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의료서비스 또한 점차 개인 맞춤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개인의료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개발, 병원별 데이터 표준화 등 이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선점이라는 일거양득의 선순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초고령 시대를 앞둔 지금 맞춤형 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이제 일부 구간 첫 시범 개통을 한 단계다. 숙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상반기 약 1000개 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공식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개발과 함께 데이터들이 교통체증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신호등, 표지판, 톨게이트, 휴게소, 관리공사 등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관들이 고속도로에 쉽게 참여하기 위한 면허증이나 국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또한 그간의 데이터 정책의 교훈을 되새겨 사회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건설이 맞춤형 의료서비스로의 혁신과 한국의 바이오헬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명절, 고속도로를 통해 귀성하시는 분들이 교통체증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시길 기원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청언과담론